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강화 등 의결

文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정책적인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등 모두 10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017년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1차적인 국정목표였다면 올해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바로 내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체감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이 국정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해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살려냈다"며 "올해는 경제 활력을 더 키우면서 일자리 확대와 가계 소득 증가로 연결시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가 골자다. 부패행위 신고자가 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누구든지 불이익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지 않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는 국내 물류 특성을 감안해 전시 상황 등으로 해운·항만 기능이 차질이 없도록 보완했다.

특히 안정적 수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 필수국제선박을 국가 필수선박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입



국회 2018년도 시무식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강당에서 열린 2018년도 시무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영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김교홍 국회사무총장, 정세균 국회의장, 진정규 국회입법처장, 이인용 국회사무처장, 황열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항·출항 및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게 해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 수송이 원활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령안으로 심의·의결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방식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예비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제한 제도를 개선해 주민 불편을 줄였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에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설치기준을 녹지 점용허가 기준에 포함시켜 명확하게 규정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규모 유통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품 수량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납품

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에 따른 납품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보완했다.

이밖에 우호증진 외국 군인에 포함하는 방안을 담은 '영예수여안'도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됐다. /뉴시스

정부, 북에 '9일 판문점 고위급 당국회담' 제의

정부가 2일 북한에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하루 만에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공개 제의에 앞서 북측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시기, 장소, 형식 등에 구애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한 "남북당국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이 조속히 정상화 돼야 한다"며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의제와 대표단 구성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 고위급 회담 제의를 받을 경우 최우선적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남북 대화가 장기간 열리지 않았던 만큼 남북 간 협안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소망스럽겠지만 일차적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복원 문제들로 계속 (대화가)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북측이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와 한미군사훈련 등 안보 현안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의를 가 능성에 대해서는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와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예단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북측이 나름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장소 형식을 제안해 온다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군사훈련 연기 문제에 관해서는 "현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 발의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학생을 포함시켜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토록 함으로써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용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2일 밝혔다.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은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학생 1명 이상 포함시켜 피해학생 입장을 대변하고 교원징계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대학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 각종 비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원징계위는 법관, 교수, 공무원 등만 징계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왔다.

노용래 의원은 "현행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인 교수의 동료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용래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김영호·김정우·김종대·민홍철·송기현·송옥주·신창현·심재권·유동수·윤관석·임종성·전재수·조정식·추기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뉴시스

민주당 '한국당 UAE 공세 의혹 부풀리기만 몰두하는 행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에 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국인과 외교 관계가 어찌되든 의혹 부풀리기에만 몰두하는 행태"라며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2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탈핵정책으로 인한 문제인 것처럼 청와대 앞 함의집회, 국정조사 주장 국회 운영위원회 단독 소집 등 청와대와 국민을 향해 헐방정치를 진행해 왔다"며 "해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지는 못할망정 셀 프롬처럼 국제평화만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뇌물수수' 혐의 최경환·이우현, 3일 구속심사

검찰, 각각 구속영장 청구... 국회 회기 끝나 불체포특권 소멸 따라

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은 감안해 그간 영장심사를 미뤄왔으나 국회 회기가 끝나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전 10시30분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최 의원을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 의원 심사를 담당한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여야가 임시국회를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두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 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 씨로부터 공천현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달 11일과 28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고려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는 절차 등도 진행했다.

하지만 후속 절차는 여야 간 이견 끝에 임시국회가 연장되면서 지연됐다. 방탄국회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지난달 29일 임시국회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단체)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후원금 사용내역
01. 위임계승 맞춤형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연 지식보급 5,733,677,999
...
66
참여해주시는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홍보대사 류수영